

7개 농장 '살충제 계란' 광주·전남에 100만여개 유통됐다

전남도 '살충제 계란 반품 신고' 재난문자 발송 동네 슈퍼 등 소매점서 거래 유통 추적 어려워

재난문자발송이 지자체로 이관된 뒤 전남도가 첫 발송한 재난문자는 '살충제 계란 반품 신고'였다. 전남도는 17일 오후 도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현재 보관 중인 계란 중 '13정화' 표기 계란은 구매처에 반품하고 시·군에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식별번호 '13정화'는 지난 16일 비펜트린이 21배 초과 검출된 나주 공산면의 한 농가에서 생산한 '부자특란'이다.

하지만 이날 긴급재난문자 발송 이후 추가로 6개 농가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로써 전남에서만 살충제 계란 농가는 7곳으로 늘어났다. 추가 검출된 농가의 계란 식별번호는 '13SCK'(나주 다시면·피프로닐), '13나선준영'(함평 영다면·피프로닐), '13우리'(화순 동면·비펜트린 27.2배), '13대산'(화순 동면·비펜트린 2.4배), '13동지'(화순 동면·비펜트린 4.1배), '13드림'(무안 운남면·비펜트린 2.3배)이다. 앞의 13은 지역번호로 '전남'을, 뒤 부호는 '생산자' 표시다. 또 나주와 함평 농가는 친환경축산인증을 받은 곳이며, 화순 3곳과 무안은 친환경 미인증 농가다.

이들 7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은 대부분 광주·전남지역에 판매됐다. 가정에서 보관 중인 계란 껍데기에 해당 식별번호가 찍혀있으면 당장 시·군에 신고하고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 이들 7곳에서 광주·전남에 유통된 계란은 100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나주 공산면에서 생산된 '13정화'가 부여된 '부자특란'은 광주·전남 30여개 도소매점에서 판매됐다. 17일 현재 파악된 유통물량은 15만7800개이며, 이 중 10만4220개는 이미 팔려나갔다. 하지만 이 물량은 지난 15일 출하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살충제를 살포한 지난 4일 다음날인 5일부터 출하 중지되기 전 14일까지 10일간 판매된 물량(약 18만개)을 더하면 28만개 이상이 이미 소비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날 추가된 화순 동면 3개 농가(하루 생산량 3만9000개)와 무안 운남면 농가(9000개)에서 생산된 하루 계란 개수가 4만8000개에 달한다. 살

냉장고에 보관된 계란 확인
이 코드 있으면 먹지 마세요



충제 살포 이후 10일동안 유통됐다고 가정한다면 '살충제 계란' 48만개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셈이다. 특히 이 내국에서 유통된 계란은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서 주로 동네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거래돼 유통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까지 사육 마리 수와 계란 생산량이 확인되지 않은 '13SCK'와 '13나선준영'을 더하면 광주·전남지역 유통된 '살충제 계란'은 100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의 식별번호가 찍혀 있는 계란은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계란은 판매가 중지됐고,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계란은 안전검사를 마친 제품이어서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산한 닭전머리 17일 국내산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닭과 계란 소비가 급감하면서 광주의 대표적인 닭 유통시장인 서구 양동 닭전머리시장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살충제 구입비 지원 해주더니 농장주 탓하는 정부와 지자체

파동 원인은 가축방역 관리·감독 소홀 ... 규정 어기고 닭에 약품 직접 뿌린 농가도 잘못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살충제 계란' 파문은 정부와 지자체의 가축방역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전남도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예산으로 양계 농가에 닭 진드기 방제약품을 지원했다. 이 약품에 포함된 성분 '비펜트린'이 결국 이번 파동에서 문제가 됐다.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살충제 계란'을 만들어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농림부는 '2017년 가축방역 사업'으로 '닭 진드기 방제약품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겪은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소독약품 구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서울·부산·울산·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방제약품 구입비 중 50%인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도비 30%·지자체 예산 70%)로 충당하도록 했다. 전체 예산은 총 3억 원(150만 마리분)으로 전남은 3200만원(16만 마리분), 광주는 80만원(4000마리분)을 산란계·종계 농가에게 지원했다.

농림부는 질병 발생 및 지역별 사육현황 등을 고려해 소규모 농가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

도록 했으며, 동물용의약품으로 인허가 된 제품을 구입해 농가에 공급하도록 지시했다.

전남 지역에서는 나주(73만7050마리 분량), 무안(66만6000마리 분량), 영광(15만5700마리 분량) 등 총 11개 시·군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사용 약품을 선정해 조달청에서 구입, 배포했다.

현재까지 약품을 구입해 배포한 지역은 나주시(25개 농장)와 화순군(1개 농장)으로 밝혀졌으며, 두 지역 모두 동물용의약품으로 인허가를 받은 '외구 프리 블루'를 구입, 배포했다. 지난해 국내 농업약품제조업체가 출시한 '외구 프리 블루'는 비펜트린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장들 사이에서 효과적인 닭 진드기 방제약품으로 정평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와 전남도는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자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는 비펜트린 성분이 포함된 살충제를 써서는 안된다"고 밝혀 논란을 낳고 있다. 또한, 계사(鷄舍)를 비운 뒤 방제약품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농가가 이 규정을 어기고 닭에게 직접 뿌려 발생한 것이라며 농가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친환경 농업의 경우 친환경 약품을 따로 고시하고 있지만, 축산업은 별도

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도 몰랐다든 입장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해당 살충제는 설명서에 나온 대로 닭에게 직접 뿌리지만 양면면 관찮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타 지역 시·도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아 친환경 인증 유무를 가리지 않고 닭 농장에게 약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창녕군은 올 6월 친환경 인증 농가 9곳을 포함한 13개 산란계농가에 진드기 방제약품 '외구 프리 블루'를, 경기도 용인시는 6곳에 살충제 '아미트라즈'를 공급했다. 모두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제품이다.

이 때문에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과다 검출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농장주 개인의 전적인 잘못이라기 보다는,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약품을 공급한 정부와 지자체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주 계란 도매업체 관계자는 "올초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 살충제를 보급해 놓고 이제와서 그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살충제를 과다사용한 농장주들도 문제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지자체에도 분명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영록 농림장관, '살충제 계란' 대국민 사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국민의 가장 중요한 부식인 계란으로 국민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 매우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참석, "정부는 그간 안전하고 건강한 농축산물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 소비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개선할 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기준 검사 대상 1239호 중 71%인 876개호 검사를 완료했고 이중 부적합이 31곳으로 나타났다"며 "87%가량

이 시중에 유통 가능하고 내일부터 적합 판정된 모든 물량이 유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계란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회수, 폐기 조치하고 있다"며 "전수 조사 내역과 조치 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책임이 막중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

본 자연장은 아름기초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